

위험물질 전남 · 울산 · 충남에 집중

인화성액체 수도권에 독성물질 전라도 포진 ... 대부분 운송중 사고

최근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라남도를 포함한 3개 행정구역이 전국 위험물질의 4분의3을 사용해 해당지역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질 관련사고는 제조나 보관 과정보다는 운송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월17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위험물질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전남 1억2536만톤으로 34.5%, 울산 1억602만톤으로 29.1%, 충남 4361만톤으로 12.0% 순이며 3곳을 합치면 전체 사용량의 75.6%에 달한다.

여수산업단지가 위험물질 사용량이 가장 많았고 울산 미포산업단지와 온산산업단지, 전남 광양산업단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위험물질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을 만드는 대량 위험물질 제조소는 전국 262곳 중 60곳이 울산에, 57곳이 전남에 각각 몰려 있다.

위험물질은 종류에 따라 지역별 분포가 천차만별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인화성액체 취급기업의 32.5%가 수도권에, 화약류 취급기업의 43.8%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가연성 고체는 경남권 63.2%, 산화성물질은 수도권과 경남권 34.4%, 독성물질은 전라권 27.9%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질 관련사고는 주로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연구원이 국내 위험물질 취급기업 163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험물질 사고유형은 운송사고가 45%로 가장 많았다.

운송사고의 원인은 일반 교통사고가 48%로 절반에 육박했고 용기불량 25%, 자동차 불량 13%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위험물질을 나르는 탱크로리의 운송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GPS 부착을 의무화해 운송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교통연구원은 제안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대형화재보다 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안전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운송 안전관리정책의 보완과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8>